

새로운 大學教育觀을 위한 哲學的 과제

具 丙 林
(本 協議會 事務總長)

우리는 대학교육의 존재형식, 규모와 질적 수준 그리고 대학에 대한 국가사회적 기대 면에서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전향적인 인식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당한 반론과 비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면서도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고등교육관 정립의 전제가 될 몇 가지 철학적 과제를 제시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한국은 많은 정치발전과 사회적 성숙을 이룩하였다. 밖으로는 UN가입과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를 비롯한 全方位의 교관계를 형성하였고, 안으로는 정치민주화와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학원도 오랜 세월을 걸친 抵抗과 葛藤의 惡循環 속에서 헤어나 이제는 안정과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꺾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분야의 큰 성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외형상 교육의 민주화나 대학의 자율이 무척 강조는 되고 있으나 대학현장의 실상이나 교육여건은 크게 落後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그 후진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학생들의 불만과 사회적 불신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의 고등교육은 하나의 轉換期的 試鍊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은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담한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놓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고 비판도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대학교육에 관한 주관적 論評이나 斷定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정부는 과도한 대학교육열을 우려하고 사회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을 비판하며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의 좁은 문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학교육을 圍繞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이 대학교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측면에 더 큰 책임과 문제가 있음이 흔히 看過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

도의 우리나라 대학교육열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성된 풍조와 경향임에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강한 교육열과 그 동안의 임금격차, 지나친 사회적 階序 의식이나 해방 후 지금까지의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 등이 작용된 필연적 결과임에 틀림없다. 교육열, 특히 대학교육열은 평소보다는 사회적 불안이나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 더욱 가열된다는 逆理가 지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녀의 장래만큼은 보장받기를 바라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희생정신이 바로 대학교육열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존재형식이나 그 규모와 질적 수준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기대 면에서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보다 전향적인 인식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 고등교육의 실상은 이미 大衆教育段階를 지나고 있으나 많은 기성세대는 지난 날의 전통적 대학교육관으로만 觀照하고 있는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서 상당한 反論이나 비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면서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될 몇 가지 철학적 과제(?)를 제시하여 토론의 광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제 고등교육이 秀才들이나 상류계층의 專有物은 아니므로 수준높은 대학의 육성 발전 못지않게 중류대학이나 평범한 대학의 교육기능에도 크게 역점을 두고 그러한 대학의 존재의미나 사회적 기능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제 대학교육은 지난 날의 秀越性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성과 개방성도 그 중요한 屬性으로 자리잡아가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회수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중간수준 및 저적으로 평범한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대학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存在價値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발전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세칭 일류대학이 되려는 허망한 꿈과 幻想을 버리고 나름대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自己正體性 있는 대학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부 실업계학교를 위주로 거의 통념화되어온 終局教育(terminal education)이란 고정관념이나 妄想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체제를 평생교육차원으로 수용하는 대담한 개혁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날의 절대주의시대나 공산사회는 국민을 국가적 필요에 따라 配置(placement)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의 의지와 욕망을 제도적으로 抑止·制限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국법과 사회적 규범 안에서 자기의 장래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본래적 權能에 있는 것이며 제도와 사회적 機制는 이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졸업 후의 취업난, 높은 학비 그리고 시간이나 노력의 投與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많을 때 그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해도 대부분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 실제 세계의 모든 나라 중 대학지원자의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가 일단은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졸업후 어느 시점에 상급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오늘의 대학교육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로 모든 학생들을 知的 측면(cognitive domain)에서만 등급화하고 서열화하여 선발하는 편협한 사고체계나 인간관이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학구적 열정이나 지적 수준이 불가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대학도 단순한 學問指向性(academism)의 本山만은 아니다. 특히 날로 다양화하는 사회, 들어가는 직종이나 직업, 그리고 자기 특징이 있는 인간본성이란 측면에서도 대중화된 대학교육은 학자나 知的 지도자만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는 아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학교공부만 잘 하는 자녀를 기대하고 이에 執着해 온 오류를 범해 왔다. 넓은 세계, 변모하는 미래사회는 다양한 소질, 서로 다른 기능, 그리고 폭 넓은 인간성을 희구한다. 공부는 다소 떨어져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材木들이 잘못된 관념, 바로 洞窟의 偶像(idola specus)으로 인해 시들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셋째로 대학교수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시각이나 여러 역할 가운데 비중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가 있다. 흔히 대학교수의 역할과 업무에 관하여는 학생들을 교수하고, 꾸준히 연구하며,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봉사과 아울러 학내에서도 대학행정에 참여하고 봉사해야 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념화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는 교육과 연구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가는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분담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일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 研究專攻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교수부담(teaching load)은 완전 면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과 같이 특성이 부각되지도 않고 모든 대학들이 심각한 교수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 속에서 교수들의 일반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연구에만 집착하고 학생들의 학문적 개발이나 능력향상에 소홀하다면 대학교수들의 본래적 역할이나 그 의무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일반 교수들은 적어도 학생지도 면에 70% 이상의 비중과 역할을 割愛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E.L. Boyer, 1987). 또 그 많은 교수들의 연구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나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할 과제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평가되지 않은 채 매년 1~2편의 논문을 의무화하거나 신규채용이나 승진에서 논문만을 평가하는 제도적 폐단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심도 있는 재검토와 성찰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

다섯째로 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位相이나 그 참여의 한계에 관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당면의 과제가 있다. 윤리와 예절을 숭상하는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교편의 절대적 권위와 학생들의 조건없는 順從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羈師父는 일치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매우 보

수적인 교육품토와 수동적인 피교육자상을 조장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래 特別權力關係說로 통념화되었던 학생들의 법률적 위상이 오늘날에는 相互契約說이 우세를 보이는 변화와 함께 현실적으로도 미국에서의 顧客(clientale)으로서의 처우가 일반화되는가 하던 일본에서도 근간 학생 消費者시대라는 새로운 풍조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수년간의 민주화·자유화 과정에서 학생회나 학생집단의 실제적 영향력이 과도할 정도로 나타나 대학의 민주화를 誤導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의 고객이며 교육 서비스의 이용자인 학생들의 건전한 회구와 요망은 대학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극단적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수하며 나름대로의 견해를 지니고 있는 성인들이다. 이제 지난 날의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학생관이나 학생의 존재의미 및 그 참여의 한계에 대한 깊은 省察과 視角의 再照明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追求와 대학 현장중심의 배려와 대책 그리고 관심이 너무나 소홀하다. 이는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蔓延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虛像이며 교육관에 있어서의 主客이 전도되고 있는 盲點이다. 대학교육에 관한 무성한 논의나 비판들을 보면 모두가 입시제도, 교육재정, 총장선출 및 일부대학의 입시부정 등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학생들의 수확실태나 의식구조 및 학업성취에 관한 실정 등은 거의 소외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조건이 되는 교수 확보율, 시설·설비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최선을 다하는 교수집단의 열정과 학생들의 학구적 열기,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의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서비스의 질과 양이 교육활동의 생산성이나 학생들의 자기성취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왜 대학을 다녀야 하고 어떻게 대학생활

을 영위하며, 대학현장에서 학생들은 의욕과 보람을 느끼며 미래에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본질적·근원적인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비판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이나 대학교육시책도 여기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新한국 創造'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조화를 도모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새로운 교육관의 재정립과 교육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官主導的인 硬直性을 탈피하고 사회 각 분야의 회구와 여망이 보다 대담하게 수용되면서 제도와 현실의 乖離가 축소되고 사회적 갈등이나 마찰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개혁과 관련하여 그 基礎가 되어야 하는 올바른 인간관이나 교육관 및 민주적인 접근방법 없이는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교육이 시대나 사회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언제나 뒤따라가는 낭비와 비능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

<投稿案内>

『大學教育』 제65호('93.9.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해외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될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정」,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정」: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1993년 6월 10일

4. 고 료: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